

朝鮮칼럼 The Column



김선영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국가 개조는 兩방향에서 이뤄져야

세월호 참사는 오랜 기간 쌓여 온 우리 사회의 후진성과 총체적 부실이라는 마그마가 압축되어 있다가 터져 버린 화산 폭발이었다. 이런 복합적 성격 때문인지 정부는 해경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유병언 수사, 관피아 척결 등 수많은 문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다. 이것들이 즉시 처리해야 할 현안이지는 하지만 문제의 핵심에 정확히 접근하지 않는 한 대증요법(對症療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바둑에서 말하는 ‘착안대국, 착수소국(着眼大局, 着手小局)’ 처럼 사건의 본질은 거시적으로 보면서 동시에 계획 수립과 실천에서는 세세한 데에 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 전 계층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감이 낮다는 사실이 자리 잡고 있다. 감독 관청의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검사 기관인 한국선급에 자리를 잡으니 유착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고 가능성을 높였다. 최상위 부유층에 들었음직한 유병언씨는 공익적 윤리 의식은 전혀 없었던 사람 같고, 소시민에 속하는 선원들과 일선 현장 근무 해결들은 직업의식과 전문성 부재로 사고 규모를 키웠다. 단기적으로는 조직 개편과 처벌 같은 처방이 통하겠지만 근본적 치료가 없는 한 악마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사회의 모든 계층, 그중에서도 특히 고위 공직자나 전문 지식을 가진 고급 엘리트 집단에 고도의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이들의 탈선을 예방하거나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그것을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국가권

력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다. 이 계층에는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모든 고위 공직자는 물론 전문가 집단과 경제적으로 상위 10%에 해당하는 부유층이 포함된다. 국가 발전의 과실을 가장 많이 얻은 이 집단은 자기 이익에 대한 어떠한 손상에도 완고하게 저항해 왔다. 관(官)피아, 전관예우, 향판(鄕判) 위세, 권금(權金) 유착 등은 선진국에서는 불법이고 강력한 처벌 대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특권 계층이 향유하는 권리이다. ‘김영란법’의 축소와 통과 연기는 아주 작은 예일 뿐이다. 이들의 탐욕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다.

아무리 좋은 물고기를 풀어 놓아도 물이 반아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즉 일반 시민의 의식도 같이 바뀌어야 한다. 초등학교 앞에서 뽕뽕 달리는 기사 아저씨, 자기 자식은 임대아파트 아이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게 할 수 없다는 어머니들, 장애인 시설을 못 들어서게 하는 주민들, 안전 불감증에 걸린 현장 근로자들,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는 농민들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선진화는 멀다.

시민으로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모든 계층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방법은 교육 체계를 이용한 장기 투자다. 하지만 현재 대입과 취업에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우리 현실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과목은 존재감조차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년까지 도덕을 배운다. 저학년 때는 기본적 생활 도덕을 배우지만 교육은 일반적이고 주입식이다. 그나마 학년이 올라

갈수록 이 과목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관심도는 크게 떨어진다. 고등학교부터 철학과 윤리는 선택 과목이고 그마저 학교 재량에 맡긴다. 학교가 이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이과생들은 거의 듣지 않는다. 대학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속 성장의 이면에서 정신적 가치를 무시하고 경제 만능주의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자화상을 본다.

정부는 사회적 윤리, 공공 가치, 시민의 책무에 대해 가르치는 과목을 초·중·고교와 대학교 전반에 걸쳐 필수로 지정하고 교육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생활에 밀착된 문제제기와 체험을 통해 시민 의식이 마음에 새겨질 수 있게 하는 살아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소속되어 있는 연수 기관들도 직업윤리와 공직자 규범에 대한 강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턱에서 오랜 기간 주춤하고 있는 이유가 경제적 의미의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권력과 돈이 사회의 최고 지향점이 되었는데 경쟁 규칙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시민의 마음속에서 공익과 보편적 가치 추구는 뒷전으로 밀려나니 국가의 에너지가 결집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든 기업이든 발전의 어느 단계에서는 윤리와 도덕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바로 그 시점에서 있다. 마침 교육부 장관이 부총리로 격상된다니 이번 기회에 교육부가 시민 의식 혁신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세월호 사고 근원적 치료 위해선 거시적 안목과 세부 실천案 필요 고위 공직자와 상위 10% 부자의 脫線 예방할 엄격한 法 제정하고 학교는 공공 가치·윤리 필수교육 정부 기관은 規範교육 강화하라 ”